

중동 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 신속대응,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예산 집중점검

연구개발(R&D)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 사전절차 진행 등 개선방안 마련도 주문

- 임기근 차관,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중동 상황 관련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신속한 예산집행 추진
-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 살피고, 현장 애로 발생시 과감한 대응 당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3.2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연구개발(R&D)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참석: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지난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비축, 기업 지원 중심으로 집행을 점검한 데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①유류비 부담 완화, ②민생 안정, ③수출기업 지원 관련 집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이 3주 넘게 지속되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집행을 꼼꼼하게 챙겨야한다.”고 언급하며, “추경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여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도 중동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1,297억원('26.1.1~3.17일, 에너지공단)을 집행하였으며, 에너지 수요 등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화물차 운송업·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바우처(최대 25만원)는 4,997억원(집행률, 86.3%)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집행중이다.

물류·유류비 상승이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등 민생 물가안정 예산은 1,095억원(52.2%) 집행하였으며, 재료비 부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15% 이상)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도 369억원(73.8%) 집행하여 민생현장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물류바우처(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는 기업 신청 등에 따라 998억원(35.5%)을 집행하였다. 중동 상황 직·간접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은 43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은 942억원(37.7%)을 집행하는 등 금융지원도 촘촘하게 병행하고 있다.

* 기업 피해애로사항(3.18일 중기부 접수기준, %): (운송차질) 69.4 (물류비 증가) 27.3 (계약취소·보류) 26.9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기술개발·투자심리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의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연구개발 예산은 13.6조원(3.20일 기준, 38.5%)을 집행하였다. 계속사업은 연구협약과 실적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중이며, 신규사업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등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 예산 주요 부처들은 연구개발 사업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관련 기업, 연구소 등에 연구개발 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모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단축, 신속한 자금배정 등 집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예산집행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연구개발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공모 등 사전 행정 절차의 회계연도 개시전 착수 등 집행 전단계에서부터 신속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	책임자	과 장	김남희 (044-214-3270)
		담당자	사무관	남기인 (nki1213@korea.kr)
			사무관	정유정 (yur igip7@korea.kr)
			주무관	김유빈 (7ybkim@korea.kr)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팀 장	전창훈 (044-202-4430)
		담당자	사무관	정상오 (sango2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311)
		담당자	사무관	정세희 (jungshi1107@korea.kr)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담당자	사무관	황인택 (hit21@korea.kr)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044-202-2320)
		담당자	사무관	오상철 (chor i73@kroea.kr)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채원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y10956@korea.kr)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238)
		담당자	서기관	배윤형 (masterkeator@korea.kr)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14-5120)
		담당자	사무관	박병일 (pabi@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하녕 (044-204-7320)
		담당자	사무관	윤상준 (redragun@korea.kr)